제142호(2017. 1. 31.)

# 2017년 10대 농정이슈

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 1

2. 10대 주요 이슈 ····· 4

1) 쌀 공급과잉 해소와 제도 개편 ····· 4

2) 농업직불제 개편 ····· 6

3)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과 농식품 수출 확대 ····· 8

4)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성장산업화 ····· 10

5) 기업의 농업 참여 ····· 12

6) 청탁금지법의 농식품 산업 파급영향과 대응 ····· 14

7)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 15

8) 신규 영농인력 확보와 육성 ····· 17

9) 농업 ICT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 19

10) 농지의 집단화와 재정비 ·····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 |
|---|---|---|---|---|
| **감 수** | 황의식 | 선임연구위원 | 061-820-2234 | eshwang@krei.re.kr |
| | 송미령 | 선임연구위원 | 061-820-2351 | mrsong@krei.re.kr |
| **내용 문의** | 김병률 | 선임연구위원 | 061-820-2011 | brkim@krei.re.kr |
| **자료 문의** | 성진석 | 선임전문원 | 061-820-2212 | jssaint@krei.re.kr |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2017년 국내외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전망**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시장 환율 기준)로 2016년 6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
-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1. 13.)

○ **농업·농촌 역시 2017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 명목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액은 2016년 대비 각각 0.8%,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성장은 정체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6년보다 1.4%p 하락한 62.4%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농가 호수와 농가 인구는 2016년보다 각각 1.4%, 2.1%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 인구는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업·농촌 미래에 희망을 주는 요소들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 도시민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질적 가치와 여유를 중시하는 삶으로의 전환에 따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경제 활력 증진의 마중물로 작용
-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과 농업 생산, 유통, 소비와의 결합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실현 및 경쟁력 강화 선도

○ **농업 성장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

- 쌀 공급과잉 요인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 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농가경영안정과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
- 점증하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농식품 수출활로를 개척
- 가축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축산업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 기업의 농업 참여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사전·사후에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적용
- 청탁금지법 발효가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의 실효성 제고
- 농업계 학생, 청년 신규 취농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농업 ICT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
- 농지집단화와 재정비를 통해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

# 경제 저성장 기조 지속, 금융시장 불안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 확산 우려

##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 □ 세계 경제는 2017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1)]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시장 환율 기준)로 2016년 6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하였음. PPP 구매력 기준 성장률은 3.5%로 전망하였음.

- 무역 둔화, 투자 감소,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주의 부상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증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비롯한 하방 리스크 증가 등이 원인임.

○ 주요 선진국은 정책 불확실성 확대, 대외수요 약화 등으로 1.8% 성장(미국 2.2%, 유럽 1.5%, 일본 0.9%), 신흥국과 개도국은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약세 대응 부족 등의 영향으로 4.2% 성장(중국 6.5%)할 것으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음.[2)]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어 통상 마찰이 커지고 비관세 조치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고, NAFTA 등 자유무역협정도 재협상하려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 □ 2017년 한국 경제도 2%대의 낮은 성장률 기록 전망

○ 한국 경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 가계부채 문제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한국은행, 1. 13.).

-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 생필품·공공요금 인상 영향을 받아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1)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 세계경제전망(2017. 1. 10.) 참조.
2) 한국은행은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3%로, 미국 2.2%, 유럽 1.5%, 일본 1.1%, 중국 6.4%로 전망(2017. 1. 13.).

# 농업 생산액 정체 및 농가교역조건 악화 전망, 미래 농업·농촌의 기회요인 발굴 및 활용 필요

## □ 농업·농촌 역시 2017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3)]

○ 명목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액은 2016년 대비 각각 0.8%,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성장이 정체되어 성장동력 발굴 및 강화가 절실함.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6년보다 1.4%p 하락한 62.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호당 농업소득(명목)은 2016년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침.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농가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채소와 축산물 공급량이 증가하여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6년 대비 0.7% 하락하는 반면,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투입재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16년 대비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 결과, 농가교역조건은 2016년보다 1.8%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유지 및 발전의 근간이 되는 농가 호수와 농가 인구는 2016년보다 각각 1.4%, 2.1%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 인구는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농업·농촌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요소들을 발굴하여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 도시민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경쟁과 속도를 중시하는 삶에서 질적 가치와 여유를 중시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귀농·귀촌 인구 규모의 증가는 농촌 경제에 활력을 높여줄 마중물이 될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과 농업 생산, 유통, 소비와의 결합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실현 및 경쟁력 강화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음.

○ 완전 개방화 시대 속에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농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음.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농업전망 2017』.

### □ 주요 현안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업 성장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해야

○ 쌀 공급과잉 요인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농업직불제의 농가경영안정과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점증하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농식품 수출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음. 가축방역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축산업이 국민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사전·사후에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발효가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신규 영농인력 확보와 육성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농업 ICT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고, 농지집단화와 재정비를 통해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야 함.

## 2. 10대 주요 이슈

### 1) 쌀 공급과잉 해소와 제도 개편[4)]

#### □ 공급 및 재고 과잉문제 지속

○ 2016년 양곡연도 말 쌀 재고량은 연이은 시장격리로 인해 전년대비 약 30만 톤 증가한 170만 톤 내외임. 지속적 재고처리 노력에도 과잉재고 문제가 금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산 쌀 단수는 542kg/10a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산은 539kg/10a로 평년단수(508kg)보다 31kg 증가하였음.
- 지난해 처음으로 구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등 재고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년 연속 시장격리로 재고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남.

○ 2017년 정부예산에 쌀 생산조정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논의 타 작물 재배유도 성과와 금년도 작황에 따라 쌀 수급 및 가격 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쌀 수급이 구조적으로 30만 톤 내외 초과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줄어들거나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이 감소하지 않으면 공급과잉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음.

#### □ 직불제 개편 및 쌀 목표가격 재결정에 대한 논란 시작 예상

○ 쌀 생산과 재고량 증가, 변동직불금 지급액 증가 등으로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산 변동직불금이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 수준으로 지급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직불제의 생산유인 등을 개선하기 위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임.

○ 현재 쌀 목표가격 188,000원/80kg은 2017년산까지 적용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4) 김태훈 연구위원

## 신속한 쌀 재고감축 노력,
##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목표가격 설정, 시장개입 원칙 수립

○ 목표가격 설정에 대한 논의는 2018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목표가격 인상 공약과 논란이 있을 전망임.

- 2013년도 목표가격 변경 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목표가격 인상 공약과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법률에 따른 목표가격 17만 4,083원/80kg보다 약 1만 4천 원 인상됨.

### □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시장기능이 회복되도록 제도 개편 필요

○ 과잉재고는 보관 및 관리비용, 가치하락 등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료용 활용 확대 등 신속한 재고처리가 필요함.

- 흉작, 자연재해 등 식량부족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비축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사료용, 주정용, 가공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

○ 지난해와 같이 생산과잉으로 인한 수급 및 가격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작물 재배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조정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며 올해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일시적 생산과잉 시에는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도록 시장개입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함.

- 2014년산부터 신곡 수요초과 물량을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였으나 시장개입 시기, 물량 등이 불확실하여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격리 효과는 반감됨.
- 시장참여자들이 수급상황 및 정책 예측을 가능하도록 풍흉에 따른 사후적 시장개입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야 함.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쌀 직불제와 목표가격 등 중요한 제도 개편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야 함.

# 직불제의 소득안정효과 성과에도 품목 간 형평성, 공익적 역할의 부족 등 문제점 지적

### 2) 농업직불제 개편[5)]

#### □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하나

○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산업정책 중 하나임.

- 직불제 도입 이전에는 품목별 가격지지 혹은 투입재 보조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WTO체제 출범과 함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직불제로 전환되었음.

○ 농업직불제 도입 이후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농가 단위에서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 농업직불제 성과에도 직불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현행 농업직불제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쌀 편중으로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밭직불제의 역할 불명확, 면적기준 지원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역진성, 농업의 공익적 역할제고 부족, 지역별 특성 반영 한계 등임.

- 첫째, 농업직불금 예산 중 쌀 직불금 비중이 73.1%(2016년 기준)로 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 등의 예산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쌀 이외 곡물자급률 제고의 한계와 쌀 목표가격의 시장변화 반영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둘째, 밭농업직불제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밭농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역할이 부족함. 밭작물 시장개방 확대의 간접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됨.
- 셋째, 직불금을 면적기준으로 지원하면서 소득 재분배의 역진성 문제가 심화되었음. 정책 전환 당시에는 대규모 농가의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 단계를 넘어서 기득권화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넷째, 농업의 공익적 역할 제고 기능이 불명확하고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함. 농업에 대한 소득보전지원의 근거는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서 찾아야 할 것임. 농가의 의무이행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함.
- 다섯째, 농업·농촌의 지역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직불제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특히, 조건불리지역 지원, 친환경농업 등 공익적 역할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5)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 단계적으로 농지관리직불제로 일원화하고, 쌀 변동직불금은 수입보장보험제도로 전환

### □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농지관리직불제로 일원화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 제고, 친환경농업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 지역 간 균형발전, 우수 경영체 확보를 위한 경영안정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직불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품목 간 형평성 확보 및 소득보전 강화를 위하여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 후 논 고정직불제와 통합하여 '농지관리직불제(가칭)'으로 일원화하는 개편이 필요함.

- 농지관리직불제(가칭)의 수급 조건으로 관행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의무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 지역을 재조정하고, 대상과 범위를 재설정하여 농업 생산 활동 중심의 지역사회 유지 기능이 필요한 지역에 가산지불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개편함.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기존 무농약, 유기농법의 범위를 넘어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차원에서 지원체계 및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특화사업적 특성이 강하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프로그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쌀 변동직불제는 전업농 중심의 수입보장보험으로 전환을 검토

○ 농지관리직불제가 정착되면 쌀 수급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쌀 변동직불제를 전업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모색하여야 함.

○ 쌀 농가의 가격위험 대응 수단인 변동직불제는 단계적으로 수입보장보험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격 변동 위험뿐만 아니라 생산량 변동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함.

#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비관세조치가 증가하고 통상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3)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과 농식품 수출 확대[6)]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비관세조치들이 계속 증가할 전망**

○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경제 침체와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적 불만도 계속 높아져 각국이 자국의 열위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

○ 수입금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지역농산물 의무사용, 수출보조금 등이 비관세조치에 포함되며 앞으로 유사한 조치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과거에도 유럽은 미국의 염소 세척 가금육에 대한 수입 금지를 취한 바 있음. 캐나다는 미국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여 양국 간 통상 분쟁이 야기됨.

**□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통상 분쟁 심화**

○ 농업 통상 분야에서도 WTO에의 제소, 수입 규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12월에 미국과 중국은 WTO에 상호 제소하였음.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불인정하자 WTO에 제소(12. 12.)한 바 있음. 미국은 중국이 쌀, 밀, 옥수수 TRQ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TRQ 관련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12. 15.)한 바 있음.

○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비관세조치가 급증한다면 농식품 수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한국 농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음.

**□ 보호무역 강화 및 비관세조치에 대응하여 권역별·수출시장별로 차별화 필요**

○ 정부 관련 기관 간 협업·역할 분담을 통해 비관세조치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통관 거부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Global GAP 등 국제인증 취득과 국제기준에 일치하는 농식품 생산 노력이 필요함.

---

6) 이상현 부연구위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고품질 농식품 생산체계 구축, 수출시장 분석에 기반한 차별화된 수출전략 수립

☐ **한식문화 전파와 병행하여 고품질 식재료 수출 확대**

○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고품질 농식품 생산이 필수적임. 또한 한국 농식품의 수요층을 기존의 교포나 화교 위주에서 현지인으로 확대하려면 한식 및 한류 문화의 전파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수출 대상국 시장의 식품 트렌드 분석, 식품 속성별 선호 분석 등 수출시장의 수요 분석에 기반한 수출전략 수립 추진**

○ 최근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로 농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수출시장 유형별 가공식품 및 가정식대체식품(HMR) 유망품목 개발이 필요함.

○ 수출 대상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식품 선호 변화, 젊은 층에서의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가공식품 수출을 국내 농식품 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서 수출증대를 국내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산물 원료 이용 비율 제고 필요**

○ 가공식품 생산에 국내산 농산물 원료 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용에 적합한 원료농산물의 대량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가공식품형 원료전문생산단지 육성, 국내산 원료사용비율이 높은 업체에 정부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제공이 필요함.

☐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국내 유통과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기능 강화 필요**

○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연계되는 품목별 대표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국내 유통과 수출을 통합하는 유통조직 성공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유통업체로 성장시켜야 함.

# 근본적인 방역체계 개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반려동물산업 성장산업화

### 4)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성장산업화[7)]

#### □ AI 조기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개선

○ 2016년 11월 16일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과 전남 해남군 산란계 농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H5N6형 HPAI가 발생한 뒤, 2017년 1월 23일까지 총 3,259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됨.

-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10개 시·도, 41개 시·군 334농가에서 발생하였음.
- 1월 23일까지 닭 2,735만 마리, 오리 245만 마리, 메추리 등 279만 마리가 매몰 처분됨.

○ 2014년 8월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과 2015년 8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 등 2차례에 걸친 방역체계 개선 방안 추진에도, 2016년 AI가 재발하여 빠르게 확산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함.

○ 따라서 2014년과 2015년의 개선된 방역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근본적으로 방역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축산분뇨 문제 해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의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농가 시설투자의 제한은 축산 선진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축산업 허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의 핵심인 ① 축산악취 저감 등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체계 구축과 ② 축산업 허가제 정착 등을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연차적 추진 계획을 수립함.

- 전체 허가 및 등록 농가 12만 6천 농가 중 적법화가 필요한 농가는 6만 190호로 나타남.

7) 지인배 연구위원

○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시설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을 확대하는 등 악취저감 노력을 기울여 농촌의 환경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가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산업 육성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반려동물 수와 보유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련동물산업과 연관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으로는 동물생산·판매업, 펫사료·펫용품업, 동물병원, 보험 미용, 호텔, 놀이터, 애견카페 등 서비스업 등이 있음.
-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애견사진사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신규직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유기 및 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열악한 사육 및 관리환경 등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 기존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수립 등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산업별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이 필요함.

# 기업의 농업 진입은 이미 상당히 진전, 진입 장벽은 매우 낮은 조건

### 5) 기업의 농업 참여[8)]

#### □ 기업의 농업 참여를 둘러싼 쟁점 재점화 가능성

○ 자본집약적 시설농업 비중이 커지고, 스마트팜이 확대되는 등 여건이 변화하면서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가 현안 과제로 떠올랐음.

○ 최근 기업의 농업 참여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주목을 받았음. 참여 계획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유사한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음.

- 2013년 동부팜한농(현 팜한농)이 화성 화옹간척지에 유리온실 건축을 추진하였다가 중단하였고, 2016년에는 LG CNS가 새만금에 스마트팜 단지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가 철회하였음.

#### □ 기업의 농업생산 진입에 대해서는 찬반논리가 공존

○ 기업이 농업 부문에 진입하여 농산물을 생산판매할 때 기존 생산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갈등의 원인임.

- 찬성 논리: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면 생산비용을 낮추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R&D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하면 기업의 참여 유인이 줄어들 수 있음.
- 반대 논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쳐 기존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시장 여건에 따라 기업은 철수할 수 있지만, 다수 생산자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

#### □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규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완화된 수준

○ 1990년 농업법인제도 도입 이후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주체, 출자 조건 등을 계속 완화하여 왔음.

-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도 진입 장벽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업 부문으로의 진입을 원하는 기업에 추가 유인을 제공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8)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유찬희 부연구위원

# 기업의 농업 진입 시 생기는 갈등은 예외적 사례, 사전-사후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 갈등 조정

○ 현행 제도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 시 생겼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예외적인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음.

-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제화 강화 등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은 과잉대응이 될 수 있음.
- 해외 사례를 보면 기업의 농지 매입 이후 재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음.

## □ 갈등 유형에 따른 사전·사후적 관리 프로세스 마련

○ 기업진입에 따른 갈등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주체 육성, 대응방안 정교화, 소프트웨어 마련 등이 필요함.

- 당사자 간 갈등(진입 기업과 기존 생산자 또는 공동체), 농정 방향 관련 갈등(기업 농업 진입 자체) 등 유형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2013년 국민공감 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중기적으로는 갈등 유형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독일에서 운영하는 갈등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 기존 사례에서 파생된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해야 함.

## □ 기업의 농업 진입 시 생기는 갈등 해결

○ 다수 기업·법인이 농업 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갈등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기존 생산자·지역 공동체 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진입을 억제할 법적 근거는 많지 않은 만큼, 새만금 특화지구 등에서 일부 시험적 시도를 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특혜 가능성 배제 등 사전적 갈등 관리와 진출 범위 검토, 농산물 생산 시 출하 경로 합의 등 사후적 갈등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시행 파급영향 분석과 단기·중장기 대책 수립 필요

### 6) 청탁금지법의 농식품 산업 파급영향과 대응[9)]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위축

○ 한우는 '16년 10~12월 도축 마릿수가 18만 3천 두로 전년 동기보다 4.2% 감소하였지만, 도매가격은 1kg에 16,780원(지육 1등급)으로 7.4% 하락하였음.

- 10~12월 한우 도축 마릿수: ('15) 191천 두 → ('16) 183
- 10~12월 한우 1등급 도매가: ('15) 18,120원/kg → ('16) 16,780

○ 난 등의 분화는 '16년 10~12월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하면서도 도매가격도 하락하여, 도매거래액은 전년보다 17.5% 감소하였음.

- '16년 10~11월 화훼 소매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화원협회 1,200개사 조사)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 생산과 고용 사정이 모두 악화

○ '16년 11월 일반음식점 생산지수(2010=100)는 86.0으로 근년 최저이며, 음식점·주점 종사자는 93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명 감소하였음(고용부).

- 일반음식점 생산지수: ('15. 11.) 91.3 → ('16. 10.) 88.5 → ('16. 11.) 86.0

○ 음식점 10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6% 감소하였고, 특히 중·대규모의 한정식, 육류(한우)구이, 일식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음(KREI).

- 피해업종의 11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1% 감소하였음(한국외식산업연구원).

#### □ 법 시행의 파급영향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실시와 대책 수립 필요

○ 품목·업종, 부위·품종·등급, 계층 등 세부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단기의 급격한 소비 위축을 완화할 수 있는 소비촉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파급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기준의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9)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 ‘제3차 기본계획’ 3년차를 맞아 중간 평가 필요

### 7)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중간평가와 개선방향[10)]

**□ 2017년은 제3차 기본계획 시행 3년차, 기본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시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기본 이념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위원회’는 농촌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18개 부·처·청의 정책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체로,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함.
- ‘제3차 기본계획’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이 농어촌에서 추진하는 정책 과제 18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약 46조 4,926억 원의 투융자 예산이 편성됨.

**□ ‘제3차 기본계획(2015~2019)’ 시행성과가 제자리**

○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15년의 정책 추진 실적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기본계획에 포함된 182개 정책과제 가운데 당초 계획했던 2015년 시행 첫해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이 22개 이상임.

○ ‘삶의 질 위원회’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해 운용함.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거주지가 도시든 농어촌이든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달성하려고 정부가 농어촌에서 충족해야 할 공공 서비스 분야의 정책 목표 최소치를 설정한 것임.
- 보건·복지(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돌봄, 영유아 보육), 교육 여건(초·중학교, 평생교육), 정주생활기반(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광대역 통합망), 경제활동·일자리(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문화·여가(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경관(하수도), 안전(방범설비, 경찰 순찰, 소방 출동) 등 7개 부문 17개 항목의 서비스 공급 목표를 설정해 농촌 지역에서 그 공급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해왔음.
- 2016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충족 수준은 2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할 때 대체로 향상된 바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소수의 항목은 소폭 향상되었으나, 2019년경 달성할 것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듯함. 오히려 2014년 대비 하락한 항목도 세 개 있음(진료서비스, 노인돌봄, 영유아보육).

10) 김정섭 연구위원

##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강화로 부처 간 협력 강화,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농어촌 주민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삶의 질 여건 만족도'를 매년 측정해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평가할 보완적 지표로 활용함.

- 제3차 기본계획 2년차인 2016년 조사 결과에서, 7대 정책부문 전체의 평균 만족도 점수는 큰 변화 없이 2015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
- 10점 만점 척도로 표현되는 만족도 점수가 높은 부문은 안전(6.6점)과 정주생활기반(6.2점) 부문이었음. 다음으로 보건·복지(5.9점), 환경·경관(5.8점), 교육(5.4점), 경제활동·일자리(4.8점), 문화·여가(4.6점) 등의 순이었음.
-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모든 부문에서 만족도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에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음.

### □ 답보 상태인 정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간 평가 필요

○ 질적 측면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면밀하게 평가해 개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야 함.

- 매년 수행되는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정책을 실제적으로 개선할 만한 점검·평가 결과를 산출하지 못함.
- '삶의 질 위원회'에 참여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들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바탕으로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중간 평가를 추진해야 함.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결과로 드러난 현실을 '삶의 질 향상 정책'에 환류(feedback)시킬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실현해야 함.

- 제3차 기본계획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19년까지 달성하기로 정한 서비스 기준 목표와 현재 수준의 간격이 커서 달성 가능성을 말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상당수 있음.
- 중간 평가를 통해 특정 부문 및 개별 항목의 서비스 기준 이행 수준이 낮은 이유를 도출하고, 이행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농어촌 영향평가(rural proofing)' 제도를 재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인 정책이나 제도가 농촌에서 비의도적일지라도 부정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를 낳고 있거나 낳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농어촌 영향평가'임.
- 여성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 정부의 각종 활동을 점검하듯이, 농어촌 영향평가는 농촌인지 관점에서 각종 법령이나 정책을 검토함.

# 고령화 심화와 청년 농업 인력 부족은 농업 및 농촌사회 지속 가능성 위협

### 8) 신규 영농인력 확보와 육성[11)]

#### □ 심각한 농가 고령화, 청년 농업인력의 부족

○ 한국 농가는 심각한 고령화로 농업을 선도할 젊은 경영인력이 부족함.

-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비중이 2000년에 44.1%에서 급기야 2010년에는 55.9%, 2015년에는 62.2%로 고령화가 심화되어 영농인력의 부족문제가 발생함.
- 더 큰 문제는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인력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2010년에 6.4%이던 수준이 2015년에는 5.7%에 그치고 있음.

○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농업종사인구의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1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68.3%, 70세 이상이 37.7%임.

- 농가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9.1%로 최고령 국가 일본(36.1.%, 2013년)을 넘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임.

#### □ 청년 신규 취농자를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신규 취농자들이 창업 시 가장 어려워하는 사항이 자금 부족(43.4%), 영농기술·경험 부족(30.2%)(KREI 2016)임을 감안하여 지역단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창업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등 교육경험이 있는 농장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취농자들이 장기연수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농장을 운영함(시·군 단위 1개소)

○ 청년 실업해소 및 심각한 농가 고령화 문제 해결 차원에서 신규 취농 준비 및 정착 초기 청년들에게는 일정 기간(일본의 경우 준비 2년, 실행 후 5년)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마상진 연구위원

www.krei.re.kr

### EU의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금 제도

○ EU는 1980년대 중반부터 청년농업인들에게 초기 정착자금(Installation Aid)을 지원함.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서는 18세~40세 미만 청년 취농인(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을 지급함.

- 기본직불금에 추가적으로 25%를 더한 금액을 5년간 수령할 수 있음. 단,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청년직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적은 25ha로 제한함.
- 국가별 배정 직접지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회원국의 의무조항).

### 일본의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

○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청년 신규취농자를 매년 2만 명씩 정착시키는 청년 신규취농 급부금(보조)제도를 실시함.

- 만 45세 미만(취농 시 연령 기준)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형(2년)'과 '경영개시형(5년)', 최장 7년 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 엔)을 지급함.
- 준비형: 농업대학·선진농가·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으면 최장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함.
- 경영개시형: 독립 영농을 실시한 농가에 최장 5년간 지급하고 부부일 경우 1.5인분을 지급함.

○ 농업법인취업지원(농의 고용사업)

- 신규 취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우선 취업해서 상당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회사 인근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영농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영농기술을 배우는 동안 급여를 받아 농촌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법인에게 1인당 최장 2년간 연간 최대 120만 엔을 교부(보조)하고 취업자(45세 미만이면서 취농을 전제로 선진농가나 법인에서 연수하는 자)에게는 2년간 연간 120만 엔을 지급함(최대 4년간 가능, 3년차 이후는 최대 60만 엔 지급).

## □ 농업계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 농업 부문 인력을 육성하는 직업학교인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학생의 영농 진출 프로그램 강화 차원에서 현재 실시 중인 창조농업선도고(3개교),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5개교)을 확대하여 집중 육성함.

- '15년도 졸업생 중 자영인원/비중: (농고) 104명/1.4%, (농대) 376/6.1% → 농고: 5% 수준, 농대: 10% 수준으로 개선함.
- KREI(2016) 조사에 따르면 농고생의 4%, 농대생의 10%가 영농 분야 진출 의향이 있음.

# ICT 기반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비용 절감, 운영을 위한 인재 양성 필요

### 9) 농업 ICT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12)]

#### □ ICT 기반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방향

○ 스마트 팜은 아직 초기 단계로 현대화된 온실·축사 등 농업시설에 ICT를 접목하여 PC나 스마트 폰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향후에는 현재의 스마트 팜에서 자동으로 취득한 생육·환경정보를 스스로 학습·분석하여 최적화하는 인공지능(AI)형 제어시스템이 개발·보급될 것으로 기대됨.

- 적용분야도 생산에서 유통, 소비, 농촌체험관광까지 확대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시설현대화 면적 중 40%), 축산농가 730호(전업농 중 10%), 과수농가 600호(과원규모화농가 중 25%)에 스마트 팜을 보급할 계획임.

#### □ ICT 기반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스마트 팜 보급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스마트 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기의 공급가격이 높음. 농가 입장에서는 ICT 기술을 접목한 기기를 설치·운용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고, 투자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스마트 팜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농업인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이며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공급업체도 표준화된 기술부품을 활용하여 개발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팜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함.

- 농업이 가진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이나 새로운 하드웨어에 숙달된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령,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및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농업분야 ICT 활용에 능숙한 인재를 육성해야 함.

12) 김연중 선임연구위원

# 미래 농업의 설계가 가능한 농업 ICT 융합 중장기 로드맵 작성하여 추진

○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스마트 농업 관련 기기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개별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표준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면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가야 함. 그동안 국내 스마트 농업 관련 기기들은 부분 제품 위주로 공급되어 왔거나, 수요자가 주문한 후 제작하여 공급하였기 때문에 시설·장비 간 호환성이 떨어져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음.

○ 농산업 ICT 관련 인프라 및 R&D 기반을 강화해야 함.

- ICT 선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비교해볼 때 농산업 ICT 관련 R&D 투자액 및 예산은 부족함. 농업정책이 생산기반, 유통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융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투자기반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스마트 농업에서 중요한 기자재 산업의 안정화와 수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농업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기자재를 조달하면 농업 부문 ICT 융·복합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움. 국내 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스마트 기기의 수출 전략 역시 모색해야 함.

○ 단기보다는 중장기 로드맵추진 전략 수립하여 미래농업을 육성하여야 함.

- 스마트 팜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온습도 및 환경제어로 균일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로드맵, 보급 정책, 주체 간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여 추진해야 함.

### □ 스마트 팜이 모든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 대부분의 스마트 팜 선도농가는 시설 설치 이전에 부단한 지식을 쌓고 관련 교육을 이수 받았으며 농업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음.

○ 무분별한 시설 및 비용지원보다는 농업부문 기술 융합의 성과를 최대한 높이고, 농업·농촌 관련 현안을 해결하면서 미래 농업의 설계가 가능한 농업 ICT 융합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해야 함.

- 관련 기관들은 농업부문 기술 융합의 구체적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ICT 융합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농업과 ICT 융합의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공동농업경영체의 실질적인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해 농지집단화 지원 필요

### 10) 농지의 집단화와 재정비[13)]

#### □ 농지집단화 및 농지재정비 추진 필요

○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들녘경영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경영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육성 차원에서 농지규모화에 의한 개별 경영체 지원보다 농지집단화에 의한 조직경영체 및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에 중점을 둘 단계에 이름.
- 농지유동화 차원에서는 농지이용의 양적 규모화보다 질적 효율화, 즉 농지이용 효율화에 중점을 둘 단계에 도달하였음.

○ 농지집단화 지원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실질적인 규모화 및 효율화를 도모함.

-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들녘단위 농업경영체를 설립하고 운영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원활화(facilitation) 방식을 지향함.
- 메뉴 중심 하향식 선정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집적·집약화 방안을 모색하고, 개별 농가의 점적(点的) 규모화에서 조직화·집단화에 의한 면적(面的) 집적·집약화를 유도함.

#### □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집단화 지원방안

○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집단화 지원은 ① 농지제도에 의한 지원, ②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지원, ③ 지자체의 역할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형태로 구성됨.

- 농지제도에 의한 지원은 「농지법」상의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운용할 수 있음.
-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지원은 먼저 공동농업경영체의 구성원 중 실제적으로 경작하는 자와 경작하지 않는 자 간에 농지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함. 그 다음으로 공동경영체와 경영체 밖 비농민(부재지주, 이탈농, 고령농)과의 농지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하는 중간관리사업을 실시함.
- 지자체의 역할은 농지집단화를 위한 지역단위 토지이용계획(농지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둠.

13)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www.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7년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KREI 농정포커스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1. 31.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성진석,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89-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